

포용적 복지시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목차

01. 포용적 복지국가와 커뮤니티케어
02. 왜 지금 커뮤니티케어인가?
03. 만들고자 하는 커뮤니티케어의 모습
04. 커뮤니티케어 제공개요
05.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1. 포용적 복지국가와 커뮤니티케어

한국의 기적

- 세계 11위 경제 대국
-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진입



한국의 위기

양극화

- 소득재분배 지표 악화, OECD 6위 (2016, 통계청)

빈곤

-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2015, 보사연)
- 노인 빈곤율 OECD 4배 (OECD, 고용동향)

불공정

-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역대 최대 266만명 (2016, 통계청)

휴식 없는 삶

- 연간 노동시간 2,069시간, OECD 2위 (2016)
- OECD 평균 1,763시간 (독일 1,363, 일본 1,783시간)

고용 없는 성장

- 청년 실업률 9.2% (2017.11월 고용동향)

올해는 '이게 나라냐'에 대한 답... 내년엔 '이게 삶이냐'에 답해야

대통령의 새해 국정 구상

-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 경제
 -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



포용적 복지국가란?



☑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



☑ 이를 통해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 받고,



☑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나라



국정전략으로서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외교

100대
국정과제

15개 과제

26개 과제

32개 과제

11개 과제

16개 과제

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1-1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 4 정책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인구 3.2%('16) → 4.8%('20)
- 의료·주거·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national minimum 보장
- 자립지원을 통한 탈 빈곤 촉진 (청년희망키움통장, 자활기업 600개)
- 빈곤 예방을 위한 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 차상위계층 통합지원 지침, 포괄적 자립상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1-2

생애 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아동수당 지급



청년구직촉진
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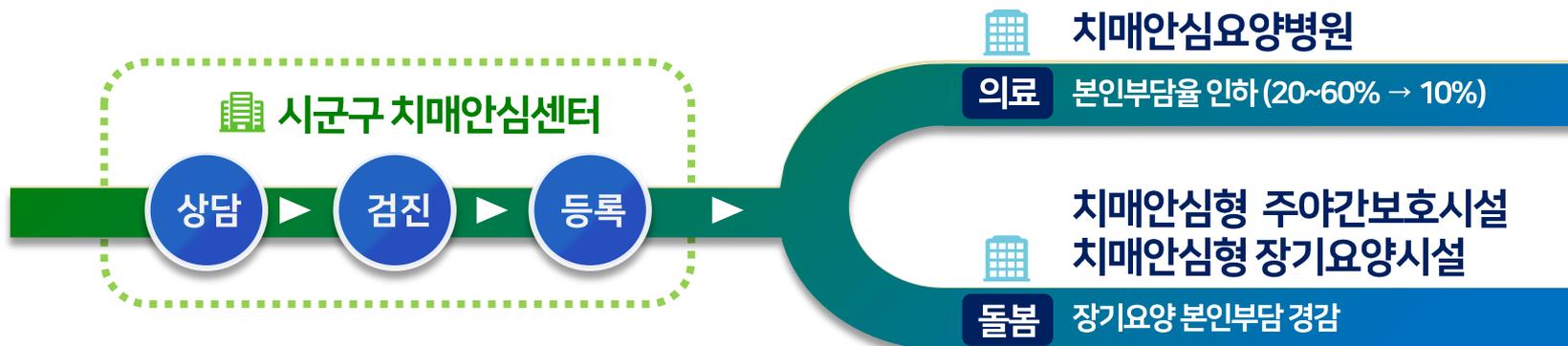


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1-3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 보장성 70% ('22)

-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 의료 보장
- 3대 비급여 부담 경감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 민간(실손) 의료보험과 건강보험 연계 (법 제정)
- 취약계층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
- 모든 질환 대상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1-4 치매 국가책임제도 도입



- 진단, 치료제 개발 등 R&D 투자 확대
-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2. 출산·양육이 즐겁고 가정이 행복한 나라

출산장려 ⇒ 일자리·주거·교육·돌봄 등 근본적 구조개혁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 조성

- 비정규직 축소 등 일자리 대책 추진
-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 공공성 강화

출산·육아 친화적인 사회로 전환

-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강화

미래세대 투자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0~5세 아동 아동수당 도입 (상위 10% 제외)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온종일 돌봄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 강화

- 정책실효성 담보를 위한 직속 사무기구 설치
- 민간주도 청년세대와의 소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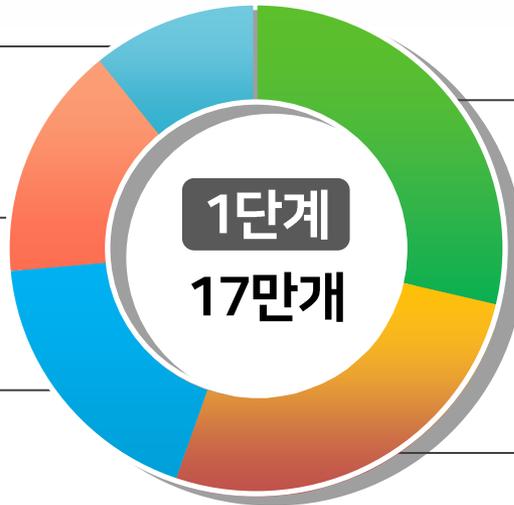
3.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창출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환경·문화 등
6만명

보건·의료
3.5만명

장애인
2.4만명



보육
6.4만명

치매요양
4.1만명

2단계

17만개

수요조사 후 설계
(18)

- ☑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 창출을 위한 처우 개선
- ☑ 서비스 질(Quality) 개선을 위한 관리주체 강화 : (가칭) 사회서비스원

4.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4-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층

- ▶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세어형·창업지원형 등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금리 최고 3.3%,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 ▶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 월세 대출 한도(30→40만원)
- 전세대출 1인가구 연령 완화
(25→19세 이상)

신혼부부

- ▶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 ▶ 신혼희망타운 7만호
(분양형, 수도권 4.7만)
- ▶ 특별공급 2배 확대
- 공공 15→30%,
- 민영 10→20%
- ▶ 구입·전세자금대출
- 구입 1.2%, 전세 1.7%(최저)

고령층

- ▶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 무장애 설계
- 복지서비스 연계
- ▶ 연금형 매입임대
- 고령자 주택을 매입·임대
- 대금은 연금식 지급
- ▶ 수선유지급여 확대
(+50만원)

취약계층

- ▶ 공적 임대 41만호
- ▶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 긴급지원주택 도입
- ▶ 취약계층 주거지원
-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 전세임대 무상지원
- 소액 주거비 대출
- ▶ 재난피해주민 주거 지원

4.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4-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공적주택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 LH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장기임대주택 확대 (15만호 → 28만호)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도심내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

공공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15만호 공급 (신혼희망 7만호)

2022년 까지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

2016년 6.3%,
OECD 평균 8%

민간분양

-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연 8.5만호 공급 확대 (수도권 6.2만호)



택지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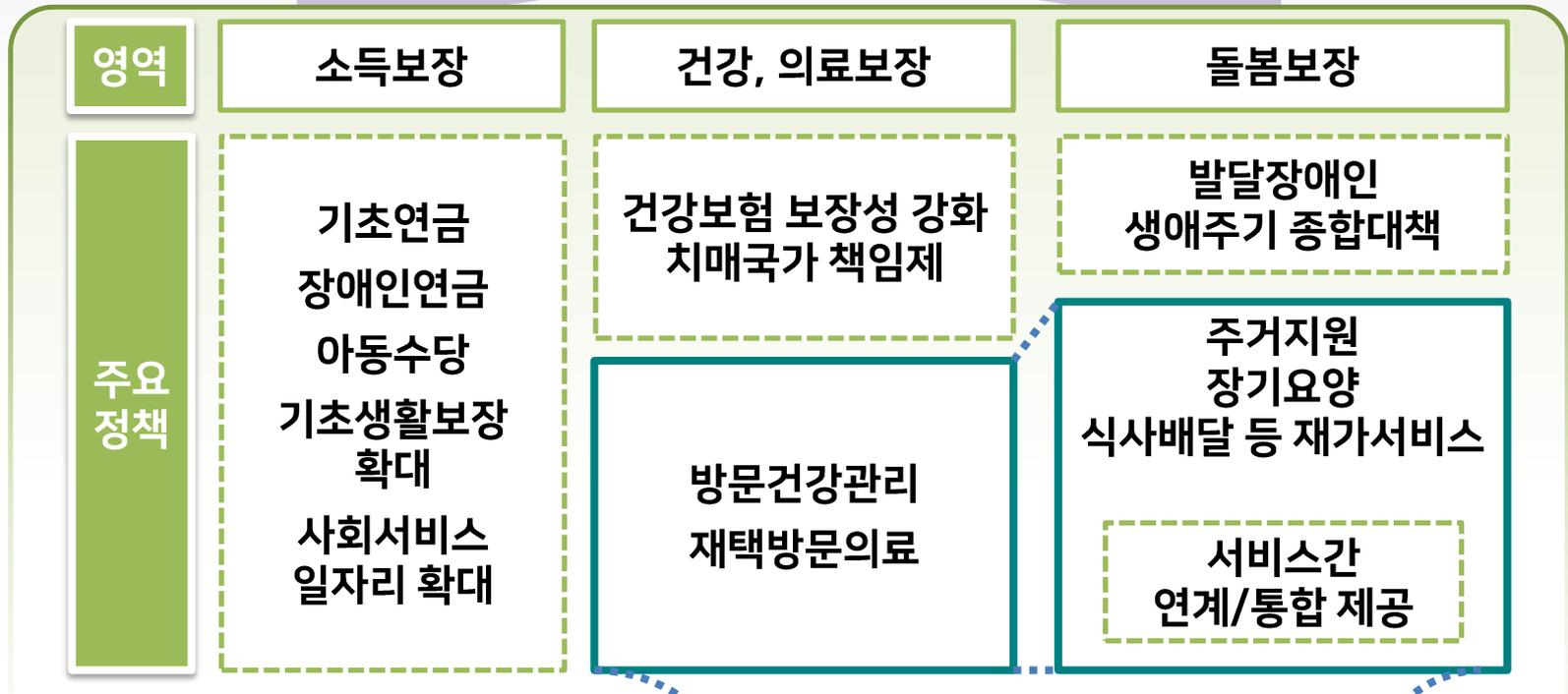
- 수도권 인근 40여개 공공주택지구 개발
⇒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확대

- 빈곤가구(주거·생계급여 동시수급) 매입임대아파트 보증금 → 무보증, 월세전환
-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분할납부제 도입(2년 분할)

5. 포용적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포용적 복지 국가



커뮤니티케어
'노인'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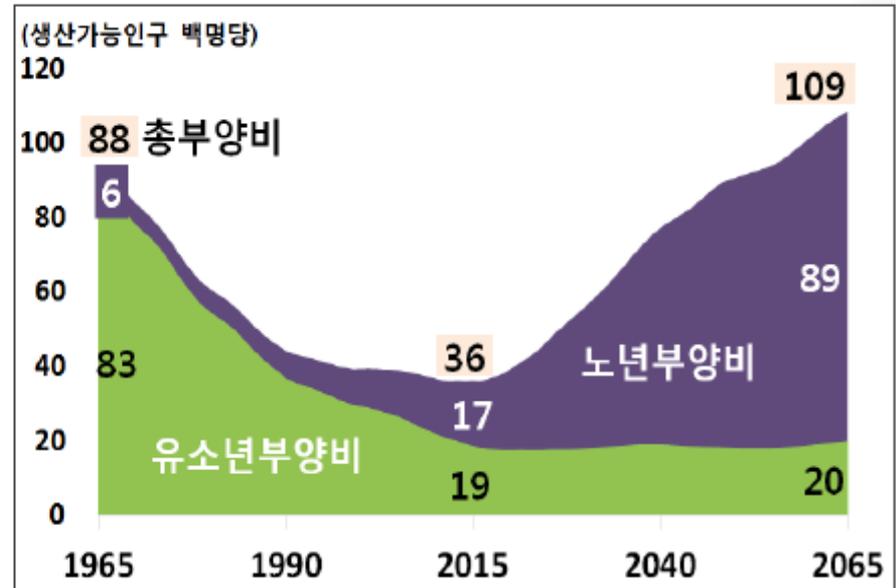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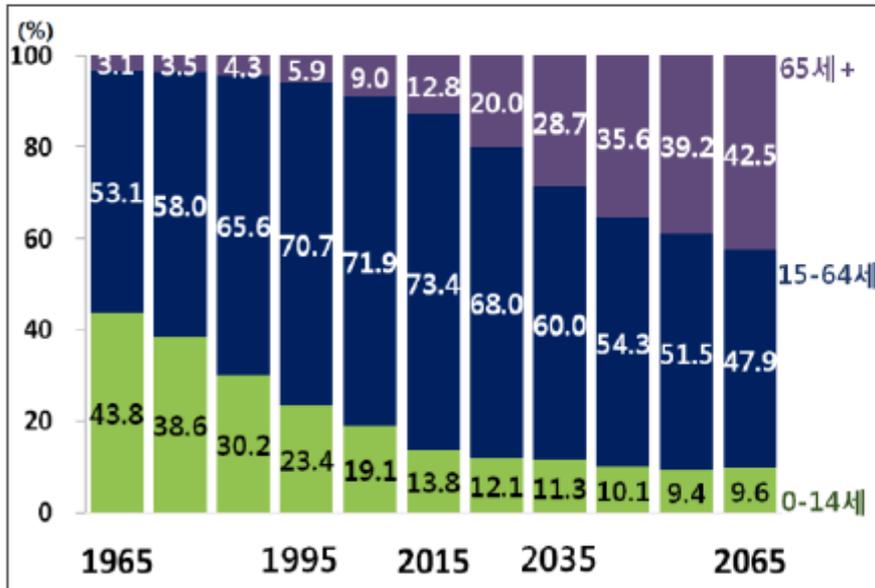
2. 왜 지금 커뮤니티케어인가?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돌봄 문제의 보편화

✔ 2017.8월 고령사회 진입(14%),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20%)

- 2017년 주요 돌봄 수요층인 노인인구는 약 735만명, **2026년 약 1,110만명**

〈연령구조와 부양비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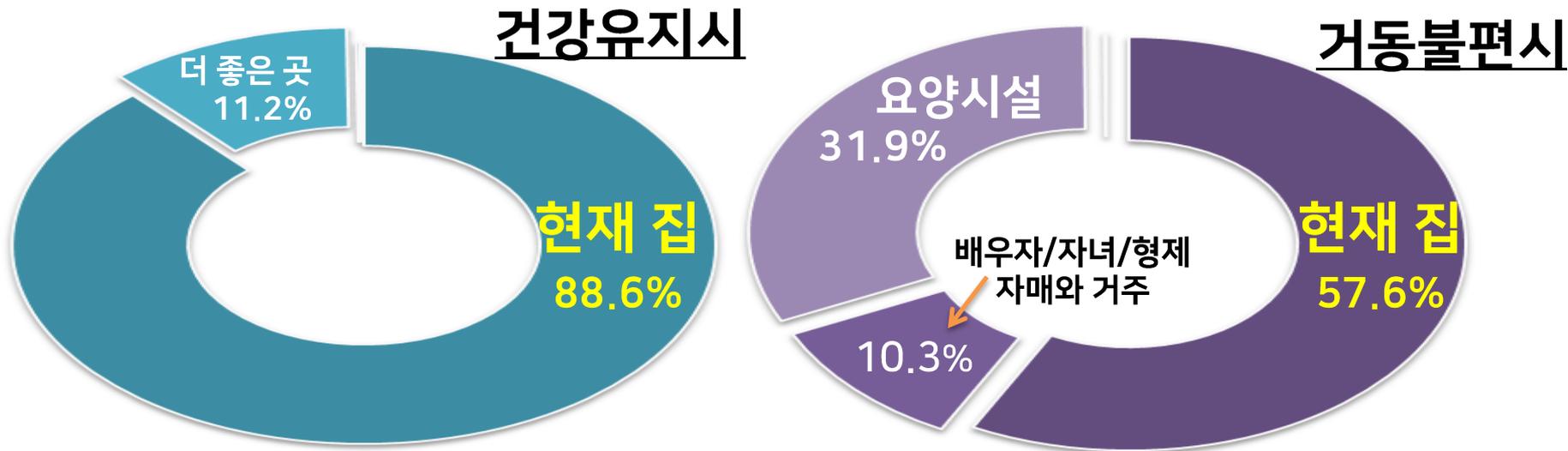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 돌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함

- 노인의 절반 이상(57.6%)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17, 노인실태조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서비스, 서비스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병원, 시설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상황

✓ 돌봄 관련 서비스의 확대, 다양화 요구와 돌봄 부담

- '성인 돌봄'은 서비스 필요도가 18.8%이나 이용률 1.8% 미충족률 90.4%('15)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약 52만명) 수발가족 중 여성 73%(38만명), 자녀 중에서는 딸·며느리가 86%('16. 장기요양보험 통계)

✓ 분절적 예산사업 단위가 아니라 포괄적 접근 필요

- 노인들은 아프고(3개 이상 만성질환 51.0%), 옷입기·목욕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9.7%)과 함께 낙상사고(15.9%)를 겪기도 함('17. 노인실태조사)

✓ 보건과 복지의 통합 (케어)

- 복지(생활) - 영양 - 보건(예방) - 의료(재활, 치료)의 원활한 연계

✓ 재가, 지역사회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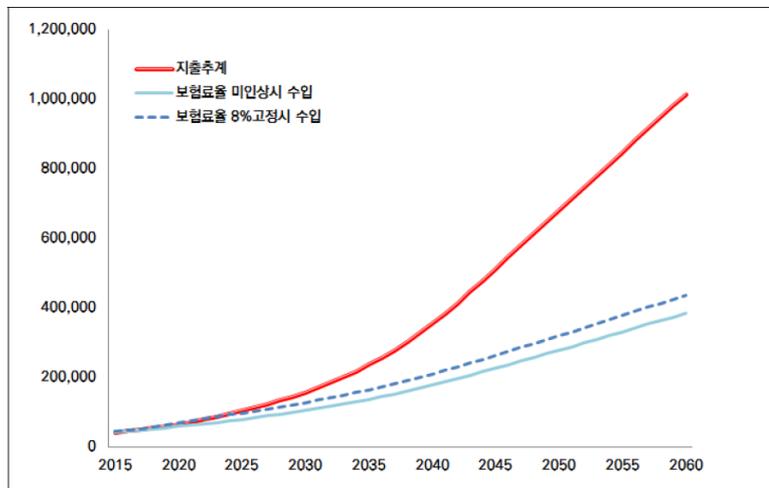
- 당사자의 삶의 질, 선택권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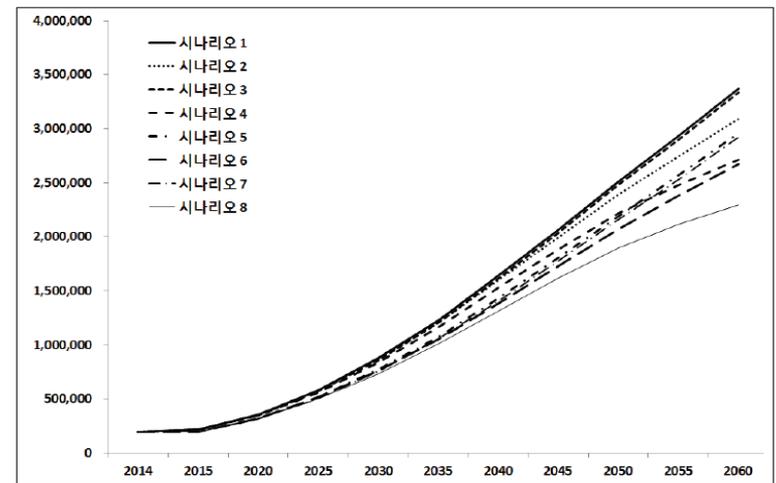
✔ 고령화 등에 따라 급증하는 사회보험 지출

-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비중) : ('16) 25조원(38.7%) ⇒ ('25) 58조원(50.8%)
- 의료급여 노인진료비(비중) : ('16) 3.1조원(46.3%) ⇒ ('25) 5.7조원(51.5%)
- 치매 관리비용(GDP 대비) : ('16) 13.6조원(0.83%) ⇒ ('30) 34.3조원(1.8%)

<노인진료비 추계>



<장기요양보험 지출추계 >



(단위 : 억원)

⇒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소위 '사회적 입원'의 문제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우려

✔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

- 보편적 수요인 **케어**에 대한 부처간 협업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복지 구현

성장주도 잔여적 복지
(~'97)

적극적 복지 확대
('98 ~ '16)

복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17~)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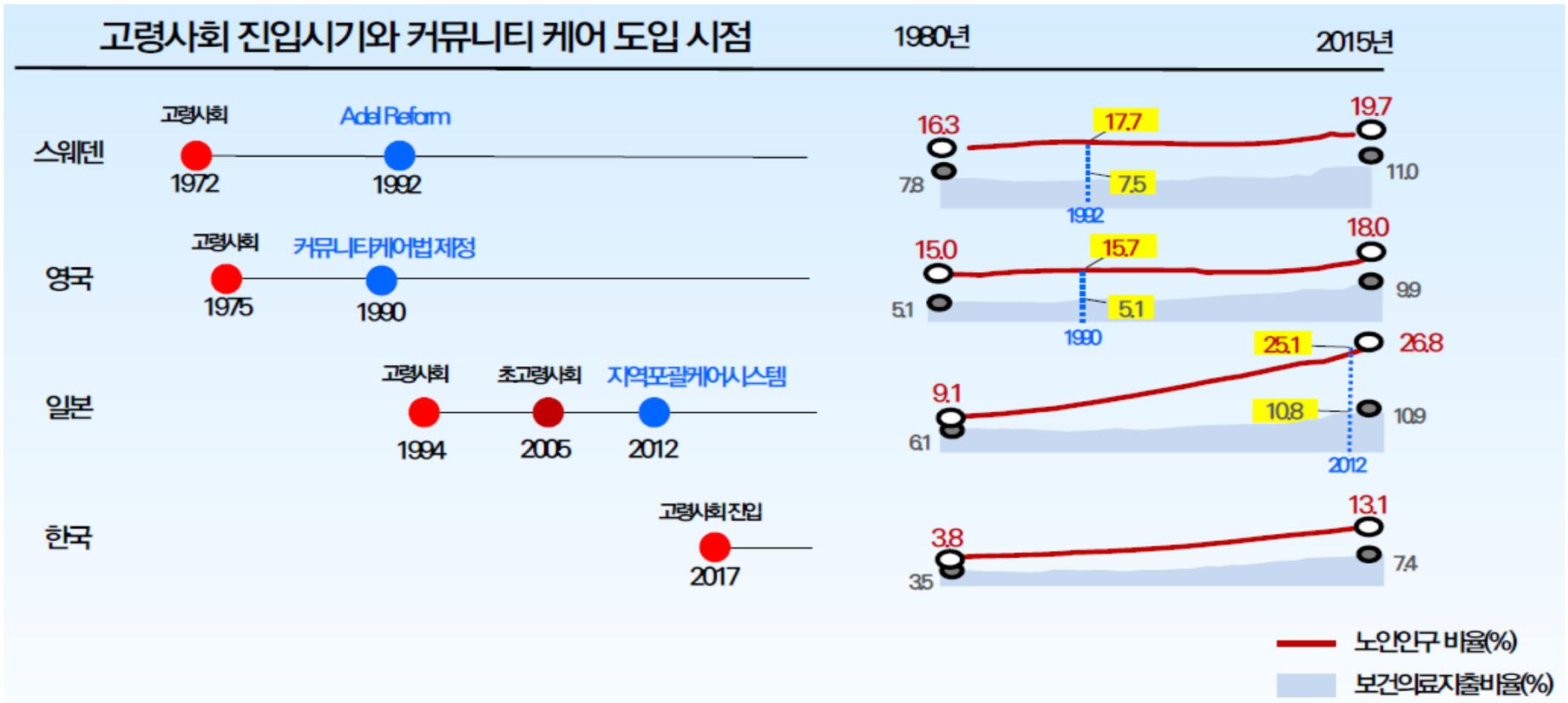
[포용적 복지]

4대 보험 도입
산재('64), 건강('77),
국민연금('88),
고용보험(95)

건보통합('00)
기초생활보장제도('00)
노인장기요양보험('08)

건보 보장성 강화(17)
온종일 돌봄('18)
커뮤니티케어 추진('18~)

✓ 해외국가들의 경우 복지제도가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복지체계 체질 전환



- '18. 1월 ○ 2018년 연두업무보고, '커뮤니티케어' 추진 발표
노인의료·요양·치매,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장애인 탈시설화 등
- '18. 3월 ~ ○ '커뮤니티케어(CC)' 추진본부 구성
본부장 :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노인의료, 돌봄, 장애인, 전달체계 등
관련 국 단위 8개 팀으로 구성(20개 이상 부서 참여)
- '18. 5월 ~ ○ 사회보장위원회 CC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 '18. 6.7 ○ 사회보장위원회, 'CC' 추진방향 발표
- '18. 9.11 ○ 복지부 - 행안부 - 국토부 MOU 체결

3. 만들고자 하는 커뮤니티케어의 모습

- '노인'편

[1] 개념 및 적용대상

- Whom**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 Who** 읍면동을 플랫폼으로 민-관 통합연계 된 전달체계가
- What** 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 Where** 자택 등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 HOW** 커뮤니티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고,
- When** '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 Why** 대상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

[1] 개념 및 적용대상

☑ 주요 대상자 : 노인

입원 치료 후 평소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택의료, 요양, 복지, 생활 지원 등의 케어가 필요한 사람

시설에 입소해 있으나 지역기반 케어가 제공되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

자택,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어려움 (노령,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계속 거주를 위한 케어가 필요한 사람

※ 향후 케어 필요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

[2] 추진방향

비전	노인이 정든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목표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간 구축	
4대 핵심 요소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supported housing • 집수리 사업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건강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보건 • 방문의료 • 퇴원지원
	요양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 재가 의료급여 신설 •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어통합창구' 신설(읍면동) •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시군구)

[3] 추진전략

☑ 당사자의 삶의 변화를 지향

- 예방, 건강관리를 통하여 재가생활을 최대한 연장
-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 안내 받고 상담 가능한 지원 체계
- 재가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
- 퇴원, 퇴소와 동시에 끊임 없이 재가서비스를 이용
- 이웃의 도움을 받고, 서로 어울려 교류하는 생활

☑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한 정책의 장기동력 확보

- 커뮤니티케어는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정책성과를 기대**

[4] 추진로드맵

☑ (2018~2022)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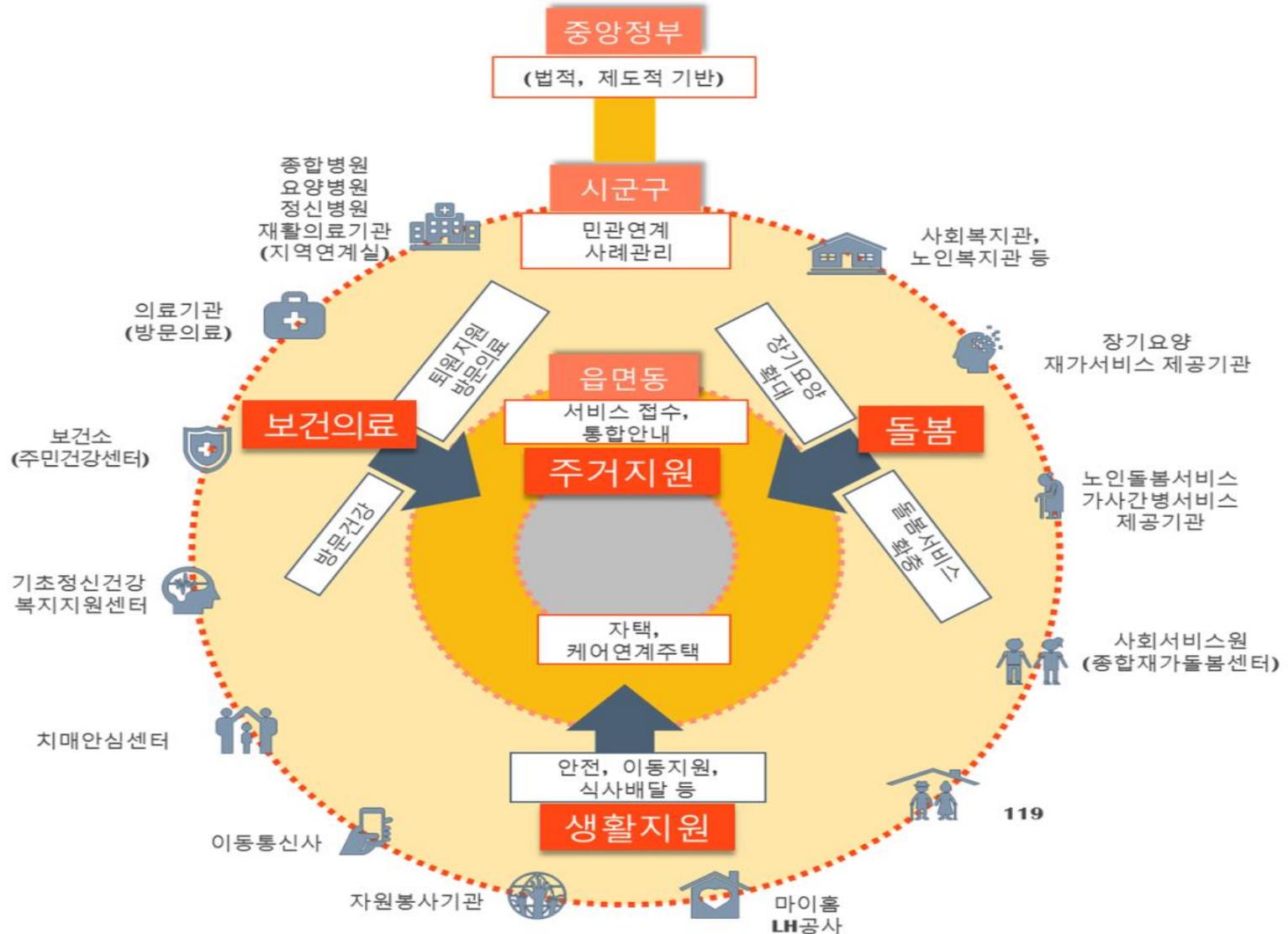
- 선도사업 실시 :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 생활 SOC 투자 : 건강생활지원센터,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 법제도 정비 : (가칭)지역사회 돌봄기본법 제정, 개별법 및 관련 지침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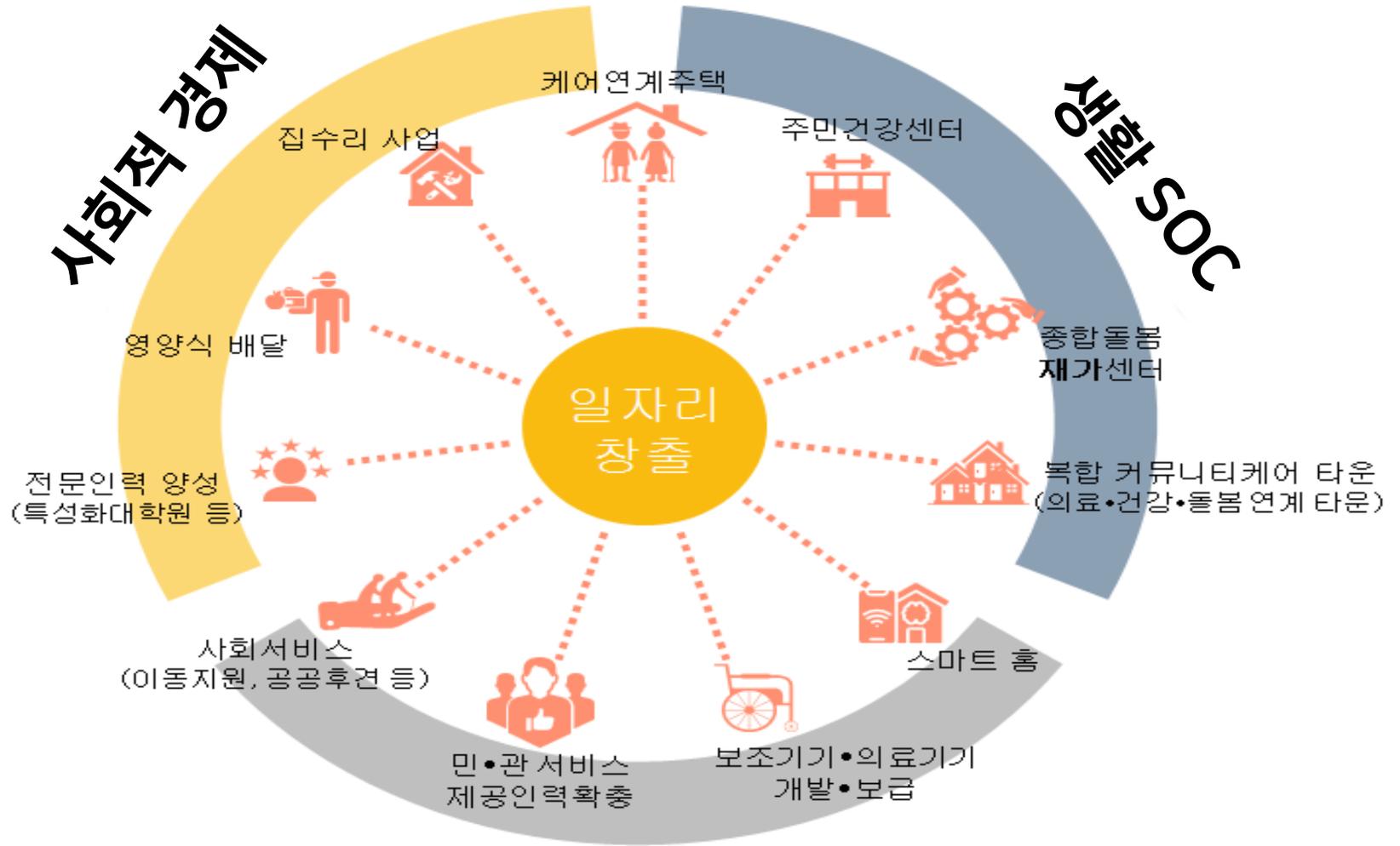
☑ (~2025)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단계

-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대적 확충
- 인력 양성,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체계
- 재정 전략 마련

☑ (2026~)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

4. 커뮤니티케어 제공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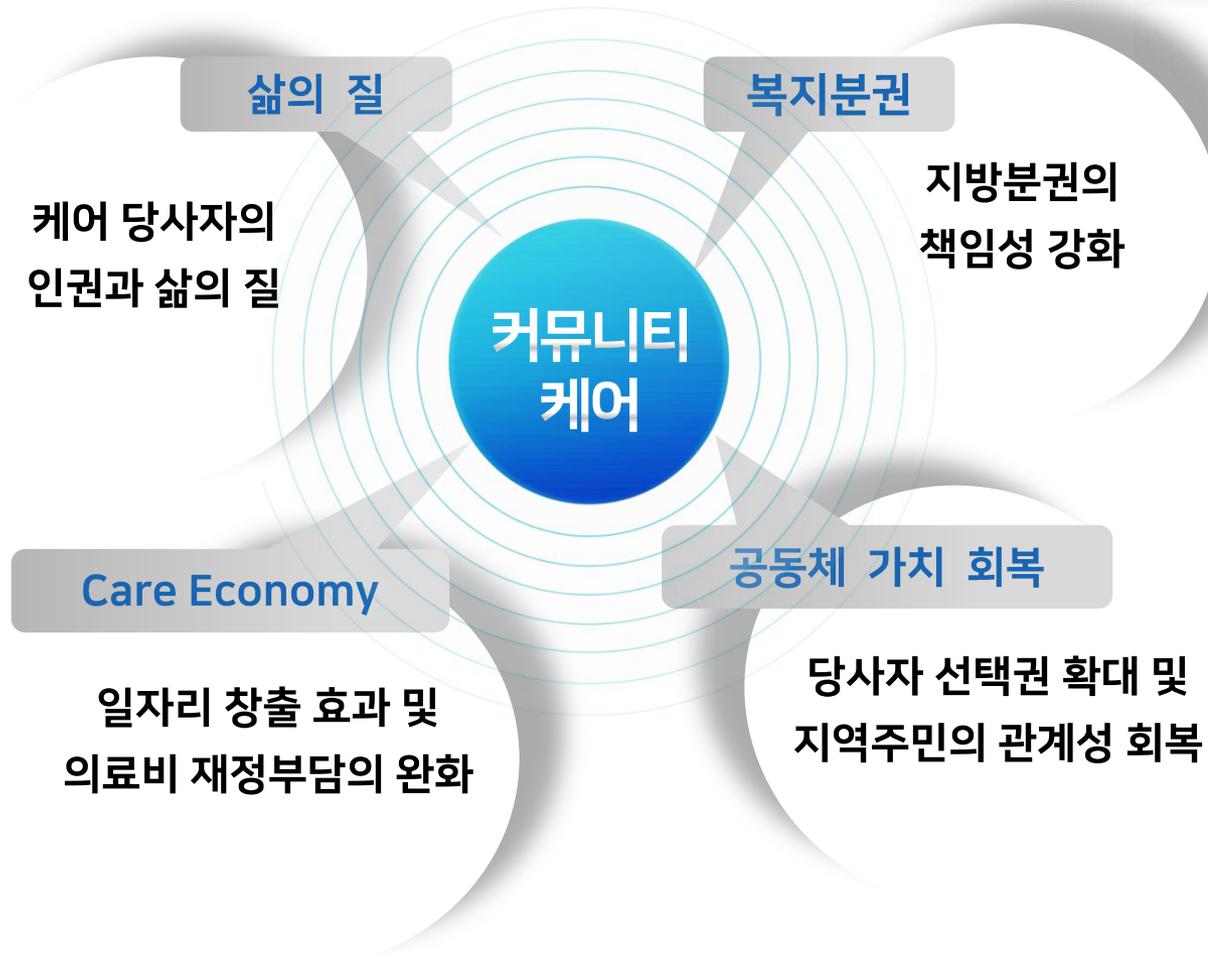
IT 등 첨단기술

5.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 '18년 ○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노인 중심) 발표**
- '18.12월~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사회보장 2040)에 반영**
- (분기별) ○ **현장정책포럼 운영(분기별 1회 이상)**
- '19년 ~ ○ **선도사업 추진 및 전국단위 확산(장기)**

- ✓ 늘어나는 일자리 약 15~20만개 이상 창출
- '22년까지 재가서비스 일자리 약 15만개 이상 추가 창출 기대
- ✓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게 맞는 돌봄을 받음으로써 인권과 삶의 질 제고
- ✓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삶의 가치 복원
- ✓ 의료비 등 복지재정 급증추세 억제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

커뮤니티케어의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



감사합니다

